

사회의 기업화

김 동 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

대선을 앞둔 오늘 한국사회의 시대적 화두는 단연코 경제다. 국민의 54%는 경제성장이 가장 큰 시대적 과제라고 답하고 있으며 사회적 평등이라고 답한 11.8%의 무려 4배를 상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경제성장이 지상 과제이던 6,70년과 같은 상황에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비록 성장률이 5%대 이하로 떨어졌지만 한국경제 성장률은 아직도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높다. 부자들의 수나 증가속도역시 괄목할만하다. 100만 불 이상 부자는 약 10만 명으로 증가 속도는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200조 원 이상의 돈이 생겨났다. 물론 IMF 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는 매우 심각해졌다. 그러나 절대빈곤층의 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과거 박정희는 성장의 시대가 지나면 복지와 분배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경제지표로만 보면 성장제일주의가 시대정신이 되는 시대는 한 참 지났고, 이제 삶의 질이나 형평성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한국인들은 이렇게 경제성장에 목매고 있나?

이것은 상당수의 한국인이 여전히 심각한 경제적 빈곤 상태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즉 한국인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느끼며, 과거 실제로 배가 고했을 때 보다 훨씬 더 돈을 필요로 하고 또 돈 버는 일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 흔히 ‘비교’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한다. 자신의 수입이 전국 봉급자 중 어느 정도의 서열상의 위치에 있는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매일 매일 의식하면서 사는 중산층 한국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자주 타인과 자신의 경제력을 비교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일부 주부들과 노동자들, 심지어는 대학생들조차도 주식투자자가 되었을 정도로 그들의 일상은 모두 ‘투자’와 ‘이익’이라는 공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좀 과장하면 이제 모든 한국인들은 소자본가 즉 경제인이 되었고, 모든 중산층은 재테크 전문가가 되었으며, 이제 경제는 한국인들의 새로운 신앙이 되었다. 대형서점의 가판대는 ‘부자 되기’, ‘투자비법’ 관련 책이 점령한지 오래고, “부자 되세요”는 지인들 사이의 최고의 덕담이 되었다. 야당후보 는 “국민성공시대” 즉 온 국민 부자 만들기를 대선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30년 전만해도 ‘자나깨나 안보’의 구호로 도배를 했던 골목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플랭카드가 걸렸다.

나는 한국사회의 이러한 모습을 기업사회라고 부른 바 있다.¹⁾ 그리고 우리사회의 집단적 ‘기업 따라 배우기’의 열기는 ‘사회의 기업화’ 현상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사회의 기업화란 기업의 CEO가 사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며, 모든 사회조직이 기업조직처럼 되는 것이며, 모든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기업 내의 관계 혹은 경제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며, 기업이 표방하는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가 되는 것 등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기업 CEO가 사회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말은 대통령보다 삼성 총수 이근희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말이며, 사회조직이 기업조직처럼 되었다는 말은 가족, 학교, 공공기관, 각종 협회나 단체, NGO 등 돈 벌이와는 전혀 관계없었던 모든 사회 조직이 이윤을 목표로 하는 기업조직과 같은 원리와 목표, 운영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들 조직의 리더는 기업의 CEO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된 것이 사회조직의 기업조직화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 조직 특히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가 기업조직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사회의 변화를 지향하는 NGO나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까지 기업화되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사회관계의 기업화란 인간 단에 수고와 노력이 모두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되며, 지금까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랑, 우정, 연대, 협동 등의 가치가 모두 ‘이해타산’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의 지상 목표와 가치인 즉 경쟁력, 효율성과 이윤창출이 사회적 가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기업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그와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병영사회를 대비시켜 볼 수 있다. 즉 국가

1) 줄지,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 - 기업사회로의 변환과 과제], 길, 2007 참조

는 물론 학교나 공장 등 모든 사회 조직이 거대한 군대와 같았던 과거의 한국사회 말이다. 군사정권 하 한국에서 대통령은 물론 조직의 우두머리는 군인출신들이었으며, 이들의 역할은 군대 지휘관과 같았다. 그들은 하급자에게 군대식으로 명령을 내렸고, 자신의 지시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대식으로 처벌을 했다. 정부 등 모든 조직운영은 언제나 지시 명령에 의해 움직여졌으며, 참여나 토론은 제한되었으며, 조직의 목표나 과제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졌고, 그것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공산당’ 취급 받았다. 이 병영사회에서 모든 남성 성인은 예비군, 민방위 같은 방식으로 군인의 신분을 연장했고, 고등학생까지 군사교련을 받았으며, 학교에서는 선후배간에 군대식으로 명령/복종 관계가 성립하였다. 90년대 이후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병영사회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한국의 4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이 병영사회가 어떠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들이 겪었던 학교나 공장이 사실상의 병영이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진 자신이 가정에서는 자식들에게 조직에서도 아랫사람들에게 군대식으로 대하는 자신을 가끔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병영사회였던 한국이 90년대 이후 갑자기 기업사회로 변했다. 이제 국가를 비롯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주변 조직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의 기업처럼 변했고, 우리는 어느새 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기업에 고용되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 청소년 10명 중 3명이 고교생부터 취업걱정을 한다고 하고, 초등학생까지도 ‘능력 없으면 잘린다’, ‘일 잘하는 사람 돈 많이 주는 것 당연하다’는 기업조직의 원리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기꺼이 순응할 준비가 되어있다.

80년대 이후 출생하여 21세기에 청년기에 들어선 젊은이들은 시회가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이후 적어도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매우 최근의 일이다. 물론 한국이 식민지 자본주의로 편입된 일제시대, 그리고 본격적인 자본주의 발전체도에 진입했던 70년대 이후 기업은 한국에서 근대화를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조직으로 등장했으며, 기업가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금전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심적 매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90년대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가나 관료들이 기업가들을 호령했고, 정부조직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없었으며, 각 조직은 나름대로의 독자적 목표를 설정하여 그것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투자와 이윤 효율성과 경쟁력은 오직 비즈니스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가, 기업의 관리자들과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다. 그래서 사랑, 연대, 우애, 정의 등의 가치가 존중되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은 “나의 청춘을 조국에 바치겠다”는 각오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기도 했으며, 도처에서 문학청년과 문학소녀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토크빌(Tocqueville)이 민주주의는 사람들 사이에 잠복되어 있던 욕망과 이기심, 계층상승의 열망을 폭발시켰다. 억압이 없어진 자유의 공간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들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민주화는 민주화운동가들에게 걸으려는 권력을 안겨 주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속았다. 권력의 실질적 원천이 바뀌고 말았기 때문이다. 기업권력,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은 군과 경찰, 관료조직보다 훨씬 더 심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과거 군사정권은 오직 사람들의 공적 활동만 감시하고 통제하였으나 기업권력은 이제 사람들의 일상과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거의 식민주의는 영토를 무력으로 지배했고, 과거의 군사독재는 조직, 법, 제도를 무력으로 지배했으나 오늘의 기업은 이제 ‘부자 만들어 준다’는 장밋빛 약속으로 사람들의 지배자로 군림한다.

2.

그렇다면 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가 기업화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사회학자인 베블렌(Veblen)은 이미 20세기 초 미국사회가 기업사회로 변하는 것을 가장 날카롭게 주목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몸담은 대학이 이미 기업조직을 모델로 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주목하였고, 주로 기부자로 구성된 이사회가 대학을 영리조직화하고 대학 구성원을 기업조직의 원리로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그는 영리기업(business enterprise)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는데,²⁾ 그는 이윤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은 근대문명을 지배하는 조직

2) 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Clifton : Augustus M. Kelley, 1975

이며, 문명화된 인류의 지속적인 이해(interests)가 바로 기업가 개인의 운명 아래에 놓인다고 설교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업적 방법과 기업적 원칙은 바로 근대 문명과 동일시 될 수 있는 데, 그것은 재산권의 보장, 이윤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 시장의 개척, 소비자 만족, 시장개척과 혁신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기업의 이러한 측면을 주목했던 시점은 20세기 초 즉 미국에서 법인체가 제1의 시민으로서 지위를 획득해갔던 이른바 ‘진보의 시기’였다. 즉 미국에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로의 전환기는 찰스 더버(charles Derber)가 말하는 1차 법인체 자본주의 시기였다.³⁾

즉 이 시기는 처음으로 기업이 법률적 개인(legal person)으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했던 시기였는데, 이제 법인은 일개 시민처럼 재산권이라는 무기를 갖고서 “사회를 지탱하고, 정부를 통제하고, 학교, 언론, 교회 그리고 여론과 국민대중의 세계를 통제하면서 현존하는 모든 제도와 기관을 침탈”할 수 있게 되었다. 즉느냐 사느냐의 적자생존의 원칙, “빈부 간의 불균형은 자연적인 존재가 갖고 있는 질서의 일부다”라는 사회적 다원주의 원리 하에 노동자들의 요구는 폭력적으로 진압되었으며, 국민주권의 형식 하에 실질적으로는 법인체가 정치를 통제하는 이른바 코포크라시(corporocracy)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다는 명분하에서 시장의 무제한적인 작동을 자연의 원리이자 신의 원리라고까지 강조했던 이러한 법인체자본주의 혹은 코포크라시가 그대로 존속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90년대 이후 세계화 국면에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활하였다. “시장은 정부보다 똑똑하다, 기업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는 비효율적이지만 기업은 가장 유연하고 효율적이다” 등등의 주류 언론의 지면을 매일 장식하는 오늘날은 바로 초기 법인체 자본주의의 부활 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은 또 다시 문명의 선도자이자 아이콘으로 기업가는 현대판 군주로 등극했다.

이론적으로 기업은 주주와 경영자(CEO),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료를 구매하며 소비자들에게 생산물을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그 성과를 주주와 종업원에게 돌려준다. 순수한 논리로만 보면 기업을 움직이는 데는 시장, 금융, 주주, 소비자, 종업원, 경영자 등이 필요하지 공공영역, 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은 불필요하다. 기업들만의 세상에는 대처가 이야기했듯이 “사회라는 것은 없다”(There is no society).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의 철학은 ‘적자생존’이며, 기업의 존립근거는 재산권이며, 기업의 활동목표는 이윤 창출이고, 기업의 일상 업무는 이윤창출을 위한 투자이고, 그 활동의 정당성은 소비자 만족에 둔다. 법인체 기업의 소유는 주주에게 있지만 주주의 권한은 대체로 경영자에게 위임되고 주주는 1인 1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주로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경영자의 전권에 의해 움직이는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게 위해 기업가 혹은 경영자는 노동자를 관리하고 소비자인 국민 혹은 잠재적 소비자인 모든 세계 시민을 상품 광고의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한다. 그리고 기업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하는 노동자는 물론, 주로 기업의 자금력에 의존하고 있는 정치권, 언론, 대학, 교회를 직,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기업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hidden power)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여전히 자신은 오직 소비자의 선택에 운명을 맡기고 있는 불안한 존재이며, 생산과 고용을 통해 사회에 이익을 주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개인’이라는 지위를 누리려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여전히 선거를 통해서 새 대통령이나 정당이 집권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가 기업화된다는 것은 정부기능 축소, 민영화, 공기업의 사기업적 방식의 운영 등으로 공공영역이 극히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 특히 몇몇 대기업이 사실상의 국가의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기업의 실적이 국가의 세금수입, 국민의 일자리를 좌우하므로, 대기업의 이해가 곧 국가이익이라는 공식이 암암리에 자리 잡게 된다.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이른바 ‘선두 기업집단’ 담론이 언론과 보수 정책집단을 통해 확산된 바 있고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진원지인 시카고학파가 그렇게 강조하듯이 기업의 의무와 사회적 공헌은 곧 돈 많이 버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 측에서 보면 최대의 사회공헌 행위가 되므로 시장 밖의 논리를 들이대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된다.

그리고 필자가 말하는 사회의 기업화는 그 동안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해온 바, 단순한 법인체의 영향력 확대와는

3) 찰스 더버, 김형주 옮김, 『히든 파워 :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을 못 이기는 진짜 이유』, 두리 미디어, 2007, 33쪽

다르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사실상의 기업들의 종업원화된다는 의미에 가깝다. 과거에는 기업이 음성적 로비 등을 통해 정치권, 정부, 언론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면 기업사회에는 정치, 정부, 언론의 활동이 사실상 기업들이 동시에 외주 용역 준 것과 같은 양상을 지니게 된다. 즉 기업의 정치부서, 기업의 행정사법 담당부서, 기업의 홍보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기업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성의 외양을 지닌 별개의 조직이 수행하도록 하되, 그 방향은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조직과 인원, 기능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 남아있는 인력도 낮에는 공식적으로는 공익적인 일을 수행하지만 밤에는 기업들의 직원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언론과 대학은 최대한 사유화하여 기업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 남은 영역은 정치인데, 정치는 유권자들이 1인 1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 대통령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가를 대기업의 직원처럼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의 음성적인 정치자금들이 그들의 당락을 좌우하게 만들고, 로비에 의해서 입법활동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법조인 역시 마찬가지다. 검은 거래를 통해서 이들이 결국 기업과 총수들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하고 판결을 내리도록 하면 사법부는 공공기관의 성격보다는 기업지원 기관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흔히 '고용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현상이다.⁴⁾ 즉 언론인, 정치가, 법조인 등 외형적으로는 별개의 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내용적으로 보자면 대기업들에 '공동' 고용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일간신문을 펴보면 최소한 40% 이상의 지면은 광고 면인데, 그 대부분은 기업홍보들이다. 일간신문은 기업홍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신문기사는 사실상 기업 홍보파트 직원처럼 되어버린다. 최근 한국 방송위에서 TV 르포 중간에 광고 넣는 문제가 논의중이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이 보편화되었다. 적어도 영화 한편 보자면 5번 이상 30분 이상의 광고를 봐야한다. 이 정도 되면 TV 영화 보는 중에 광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광고 보는 중에 영화를 본다고 해야 맞다. 그렇다면 기자나 PD 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사실상 광고주들인 셈이다. 정치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이 의회에서 국민일반과 관련된 입법, 의정활동은 하는 것은 사실이나 가장 중심적인 것은 결국 기업과 관련된 입법들이다. 아직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정치가들, 특히 기업가 대통령 부시처럼 공적 일로 국내 출장을 가도 대부분의 시간을 그 지역의 후원자들 즉 기업가들을 만나는데 보낸다면 그는 국민, 혹은 지역구의 대표자라기보다는 사실상 기업들이 뽑아서 백악관에 보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

결국 고용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다. 따라서 사회의 기업화는 곧 민주주의의 사망, 혹은 파시즘의 도래를 의미할 수도 있다.

3

모두에서 보았듯이 애초부터 대기업에 대한 법적 정책적 규제가 매우 느슨하고, 기업에 대한 이사회, 노조, 소비자, 주주 등의 감시와 통제가 제도화되어있지 않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사회의 기업화 특히 대기업 논리의 무차별적인 확산, 공공성의 약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 해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사들 앞에서 "기업이 경제발전 90% 이상을 담당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한 바 있다. 그 논리를 조금 확장하면 기업은 경제가 제일인 시대의 최대의 애국자이므로 앞으로는 기업을 수사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몇몇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업 총수들을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집행유예로 석방하였는데, 그것은 법원이 이제 '경제를 너무 걱정할 나머지' 경제 살리기 전선에 총동원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에 '안보'를 책임지던 군과 공안기관이 법 위에 있었듯이 이제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벌기업의 총수들이 법 위에 있다는 말이 된다. 기업이 '경제발전의 90%를 담당했다'는 주장이 먹히는 사회에서 법, 국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사회 일반도 기업에 '봉사'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처럼 선도기업집단이 사실상 총수 일가의 독재 하에 있는 재벌기업인 경우, 몇몇 재벌기업의 총수가 기업집단 자체를 대표하게 되고, 이들이 사실상 국가의 대표자가 되어 이들의 의사에 국민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실상의 독재체제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대표선수격인 재벌기업의 활동이 곧 국가 혹은 공공성과 동일시된

4) 데이비드 코튼, [기업이 세계를 지배할 때], 세종서적, P211

다. 한국에서는 1등 삼성은 곧 국가이자 공익이 되고, 삼성이 하는 일은 애국적인 일이 되며, 삼성을 비판하면 국가를 비판하는 일이 되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감독과 규제는 시장경제의 적, 즉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다. 한국의 국회나 검찰이 앰버랜드 편법증여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7년째 이견회 회장을 국회에 소환하지 못하는 일, 한국의 검찰이 삼성 X-file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폭로한 기자만 구속한 일, 「시사저널」 사대에서 드러났듯이 언론이 삼성 비판기사를 신지 못하는 일은 모두 우리 사회가 1등 기업에 의해 사실상 식민화된 현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답론은 곧 실천이고 현실이다. ‘기업이 최대의 애국자’고 정부는 비효율의 대명사라는 기업사회의 논리가 통용되면서 이제 기업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삼성의 무노조경영, 삼성의 편법 상속, 삼성의 하도급업체 불법 행위는 여기서 발생했다. 삼성자동차는 1998년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조사관으로부터 증거자료를 빼앗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삼성카드도 조사관의 진입을 막았으며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삼성전자는 2004년 하도급업체에게 서류조작을 지시하였고, 삼성토탈은 2005년 부당공동행위 혐의조사를 하던 공정위 조사관에게 증거자료를 빼앗아 폐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실제로의 조사방해, 조사 거부는 내부의 방침에 따라 훨씬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부의 로비와 하부의 하도급업체 단속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미리 차단되고 있다.

사회의 기업화는 오늘의 한국사회에 적자생존의 원리를 확산시켰다. 미국의 우수대학을 졸업한 영어 잘하는 일부 인재들과 대기업 정규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경쟁력 없는’ 모든 국민, 즉 중소기업 사장,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농민, 장애인, 노인과 아동 등 대다수의 국민들은 점점 더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의 밥줄인 중소기업은 두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속수무책인 처지에 놓여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86%는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중단 위험 때문에 참고 있다고 한다.⁵⁾ 그들은 정부의 불공정 거래방지 대책이 있는지조차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 대기업의 탈법은 전혀 적발되지도 시정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독점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갈을 빼들었다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재계의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완패하고 말았다. 독점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대한 부정’이라고 반발한 재계와 대다수 주류언론과 학자 심지어는 산자부의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약육강식의 시장원리를 그대로 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체에게 납품해야 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 법, 시민사회란 거의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부자 예수가 거지 나자로를 야단치는 형국이니 나자로가 갈 곳이 없게 되었다.

얼마 전에 법원은 철도노조에게 불법파업으로 회사인 코레일에 손해를 입혔으니 51억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원래는 영업손실이 86억인데 회사도 약간 잘못을 했으니 60%만 내라는 판결이었다. 이러한 민사상의 손해청구에 대해 중요 일간지의 기사는 ‘불법파업막는 확실한 방법은 돈’이라고 환호하고 있다.⁶⁾ 즉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불법 노조활동을 길들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번 포스코에서도 민사상의 처벌은 효과를 톡톡히 발휘한 바 있으며, 두산에서는 노조원 재산가압류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적이 있다. 노조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경제적 손실로 보상케 하는 방법이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방법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노조의 존립과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약육강식의 논리에 대한 사회적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과 개인을 동등한 존재로 보고 양자의 잘못에 대해 모두 돈으로 배상케 한다면 경제적 약자는 모두 파산하고 오직 법인들이, 부자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즉 기업에게 적용되는 논리와 노조에게 적용되는 논리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서구 민주주의의 성과인데, 이제 그 모든 성과를 원점으로 돌리는 논리가 주요 일간지의 지면에 공공연하게 거론될 정도로 한국의 기업사회는 섬뜩할 수준이고 브레이크가 없다.

5) [한겨레신문], 2007.10.23

6) [중앙일보], 2007.10.20

이것은 재산권의 논리가 공공성의 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하나의 징후다.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1992년부터 학내 분규를 겪어온 상지대학의 전 이사장인 김문기의 손을 들어주면서 “학교법인에게는 사학의 자유가 인정되고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헌법정신은 법률 해석 시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즉 학교법인의 공공성보다는 설립자의 재산권 보장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임시이사의 권한은 제한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어떤 불법적인 과정으로 상지대학교를 획득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사기업의 설립과 동일한 것인가도 심각하게 문제제기되지 않았다. 물론 이 판결문에서 공공성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재산권보다는 하위의 가치로 자리매김되었다. 바로 법원의 이러한 시각이 앞의 노동판결에도 나타난 셈이다. 민법의 원리가 인권, 노동, 교육, 환경 등에 적용되면 우리사회에서 기업 말고 살아남을 조직이나 개인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누가 돈으로 으로 기업과 상대할 수 있겠는가?

베블렌이 언급했듯이 재산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을 만능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기업의 재산의 대부분은 기업자체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세계 지원과 인프라, 즉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사회의 기여, 그리고 토지 이용 등 모든 부분에서 인간의 노력 이전인 자연자원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력과 자연은 재산처럼 다루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 대해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가 파괴될 위험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후손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노동규제와 환경규제는 바로 사회의 지속성, 아니 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서 지금까지 합의되어 온 것도 그러한 이유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한국 자본주의의 브레이크 없는 신자유주의 논리는 이런 조항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반성능력을 결여한 채 지금 그것들이 기업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으니 없애자고 주장한다.

사회가 거대한 기업처럼 되면 노동자나 시민은 종업원, 소비자로서 호명되고 ‘사회’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조직, 유권자 집단, 감시조직 등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다양한 시민참여의 영역 혹은 조직들은 크게 위축된다. 한해 무려 2,351시간을 일하는 세계 최고의 일개미 한국인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 회사가 한국인들의 시간을 지배하니 그들이 지역사회나 시민단체가 갈 여유가 없다. 한편 그나마 쉬는 시간에도 그들은 소비자로 호명된다. 그래서 여가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은 미디어 등을 통해 전달된 기업 측의 설득에 완전히 노출되고 기업이 원하는 바, 수요층 즉 욕망의 주체로 변해간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점점 더 광고와 홍보에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 비용은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소비가 된 우리들은 이제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가진 일 중독자가 되고, 다른 방식의 삶, 사회참여의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된다. 소비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은 곧 광고 홍보의 공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공적인 공간이었던 것이 이제는 모두 상업 공간이 되었다. 대학의 캠퍼스에는 스타벅스, 툄킨도너스, 버거킹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라운지를 차지했고, 깔끔한 식당에는 대형 LCD 화면이 설치되어 설새없이 지원기업의 이미지 광고가 반복된다. 고려대의 어떤 학생은 1학년 때 LG와 포스코에서 지은 엘포관이라는 최첨단 시설과 대리석으로 지은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을 하다가 2학년이 되어 정경관에서 공부를 하니 시설이 너무 형편없어서 불만이라고 학교 측에 시설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⁷⁾ 그러나 삼성이 지은 백주년기념관에 가보고서는 "역시 삼성이다"라고 놀랐다고 하는데, 그 화려함과 편리한 시설에 놀란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삼성에 들어가서 그러한 높은 보상과 대우를 계속 누리려 하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은 당연하다. 아직 중.고등학교까지 기업의 광고판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중.고등학교 교재까지 기업이 만든 것을 사용하는 지경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추세로는 그것도 시간문제다. 이미 한국 공교육의 보루인 교육부가 기업과 합작하여 경제교과서를 편찬해서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기업이 단체들은 기존 경제교과서가 시장경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불멘소리를 한다. 그러나 외국의 교과서를 두루 살펴본 다른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 교과서만큼 반노동, 친기업적인 교과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이제 모든 학교

7) “빼까번쩍 캠퍼스 라이프 이야기”, [한겨레 21], 2007.9.5

는 학생을 미래의 투자자 소비자, 충성스러운 종업원으로 만드는 기관이자 공간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머리에 노동의 가치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대학생들은 왜 대학 캠퍼스가 상업광고로 도배를 하는 것이 문제인지, 왜 대학생 축제에 기업이 협찬광고를 하는 것이 문제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라온 과정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접했던 영상물들과 교재들, 그들에게 익숙한 공간들은 모두가 경쟁에 승리해서 부를 얻고, 그것으로 마음껏 소비하는 일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이 경쟁에서 탈락해서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면 그들의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 번도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없는 소비사회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행동들이 결국 기업화된 사회에서 많은 탈락자들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고, 그것은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들은 개인적 성공의 신화에 집착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의 처지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오늘의 20대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대단히 낮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세간의 가르침을 따라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기업화된 사회에서 이들은 기업이 아닌 곳, 즉 공무원이나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노량진의 골방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다.

사회가 기업처럼 되면 사사건건 기업 활동을 트집 잡는 노조는 앞의 민사상의 손해청구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불필요한 존재이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존재로 간주된다. 최근의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노조의 신뢰도는 밑바닥이다.⁸⁾ 그리고 한 때 우리사회의 희망으로까지 간주되던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오늘날 시민단체, 노조가 영향력은 물론 신뢰도까지 상실하고 있는 것은 실제 시민단체에 시민참여를 제대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역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중시하는 경제주의 노선을 걷는데서 초래된 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뢰도 상실은 시민단체나 노조가 특별히 잘못하거나 부도덕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주류 언론이 시민단체와 노조의 조그마한 잘못도 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침소봉대하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면서 실제 기업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대변한 데서 초래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최고의 조직인 기업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 그리고 스스로 우수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업, 대기업으로 가려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경제적 보상이 높은 곳을 향해 물러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동안 일부국가 특히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최상의 인재들이 기업보다는 공직을 선호하였으며, 비록 권력이 부를 얻는 통로였다고는 하나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법조계 등 권력을 보장받는 기구가 돈으로 보상받는 기업보다는 젊은 엘리트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재의 배분질서에서 드디어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직에 있던 엘리트들이 대거 기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설사 지금 공직에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기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난 셈이다. 이제 최종 목적지는 기업이 되었다.

원래 이러한 경향은 주로 미국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미국에서 50년대에는 최고 우수한 인재들이 CIA 등 정부기구에 흡수된 적이 있지만, 젊은이들에게 기업부문이 언제나 정부보다는 선호대상이었다. 최근에는 그 경향이 더욱 심해져서 미국 대학생이 첫 직장으로 선호하는 곳 중 10위 안에 든 곳은 국무부와 CIA 두 곳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2002-2006 사이에 공직을 그만 둔 고시출신 관료의 수가 29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20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탈규제로 인해 정부의 권한이 상실되었고, 경제적 보수에서 민간부분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법조계, 행정부의 인재들이 모두가 대기업으로 특히 삼성으로 몰려가고 있다. 2003년 이후 8명의 퇴직 검사가 삼성으로 이직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퇴직법관의 95% 이상이 개업을 하고, 그 중 상당수는 자기가 공직에 근무하던 곳에서 개업을 했다고 한다. 로펌으로 간 퇴직 판검사의 수는 2002년에는 22명 이었는데, 2006년에는 48명으로 급증하였다. 2003년 이후 퇴직한 법관들 중 11명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사기업체에 취직했으며 그 중 6명이 삼성을 택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이 법조인이었던 시절 공직자로서 터

8) 노동연구원의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노조의 신뢰도는 5.4%로서 모든 조직 중 최하위다. 「경향신문」, 2007.9.20

특한 노하우를 반대로 활용하는 일, 즉 기업이 어떻게 하면 정부의 감독과 법의 규제를 피하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영리행위 혹은 높은 보수가 애초에 권력을 선택했던 일부 법조인들의 최종 정착지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상당수 고위직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의무감보다는 사기업과의 비교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일부 고위직에게 공직은 점점 대기업 임원 진출을 위한 경력준비 과정이 되고 있다.

5

하일 브로너와 서로는 “대기업이 생산의 핵심이 됨으로써 생기는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은 자본주의 사회 또는 선진사회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⁹⁾ 그러나 이제 우리사회에서 대기업의 위치는 단순한 영향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었다. 우리는 이제 대기업이 곧 국가이자 사회 그 자체가 되어버린 곳에서 정부와 법은 왜 존재해야 하며, 공공성은 왜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가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해야 할 지경까지 왔다.

물론 대기업의 영향력 확대, 사회의 기업화를 이론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이론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에는 일면의 진실이 있다. 예를들어 오늘날처럼 지구적인 차원에서 죽기 살기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한국의 대기업은 세계무대에서는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그들이 말하듯이 이제 국가의 보호막이 없어진 마당에 기업들은 지구적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 노동력 이용 상의 유연화, 법인세 인하, 자체의 혁신, 최상의 인재 확보, 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 노조의 양보없이는 살아남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은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며, 변화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습능력이 매우 뛰어나야 하며 유연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생산과 혁신을 통해 높은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한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아무리 제대로 이루어지더라도 고용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무한경쟁과 만성적 위기 상황에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기업의 CEO는 기업이라는 큰 조직을 움직이는 권력자라기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과 운명을 양 어깨에 걸머지고 전쟁터의 장수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반만의 진실이다. 이 세계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대기업의 성공이 모든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더 나아가 양극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유평타이는 설득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 경제가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 것은 맞지만 사람은 경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다. 정부나 사회가 없다면 기업 또한 존재할 수 없고, 기업이 잘되는 것이 곧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약 신자유주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사회의 피폐화는 시간문제이며, 미국의 1차 법인자본주의가 대공황과 전쟁으로 귀결되었듯이 개별 기업의 존립 자체도 위태롭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의 이론적 무기를 제공한 마이클 포터도 “기업이 성공하려면 건강한 사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성공적인 기업이 있어야 한다”¹⁰⁾라고 말했는데 오늘의 한국은 마치 사회가 없어도 기업만 잘되면, 그리고 사회가 모두 기업처럼 운영되면 잘 될 것같은 논리가 일반화되고 있다. 지난시절 미국 발 반공주의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공할만한 학살, 억압 및 독재를 낳았듯이 미국 발 기업사회의 논리가 한국을 거대한 주식회사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기업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기업의 사회화가 가져올 위기적 징후를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 공공성이 무너지면 기업의 존립에 필요한 신용, 자원,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소비시장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9) 로버트 하일브로너, 레스터 서로, 조운수 옮김, [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까치, 1994, 243

10)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06년 겨울호, 「한겨레 신문」, 2007.10.26